

21세기 한국전쟁 연구의 과제 사람과 전쟁

이완범

1948년 분단 정권 수립에서 그 비극의 기원이 형성됐던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전면전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으로 일단락됐다. 한국인들에게 6·25라고 통칭되는 한국전쟁-6·25전쟁¹⁾은 한국

1 국제학계에서는 'Korean War,' 일본에서는 '朝鮮戰爭'이라고 통용되며 한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쓰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이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6·25 전쟁 50주년, 『조선일보』, (2000년 4월 20일). 명칭에 대한 토론은 김학준, 「6·25 전쟁에 관한 몇 가지 예비적 토론」, 한국전쟁연구회(편), 『탈냉전 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서울: 백산서당, 2000)에 나와 있다. 이 글에서 김학준 교수는 6·25 전쟁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의 조총련계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6·25 전쟁의 도발자는 누구인가?」, 『조국』(2000년 6월). 2000년 6월 24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났으며 미군은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참전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6월 27일 담화를 통해 6·25 조선전쟁은 미국이 도발한 것이며 이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담화에서 그들이 사용해오던 용어인 '조선전쟁'을 '6·25 조선전쟁'이라고 호칭한 것은 이채롭다. 『로동신문』, (2000년 6월 28일).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이 전쟁밖에 없지 않은 것은 아니며, 미국 사람들이 이미 1871년 신미양요를 한국전쟁이라고 불렀으나, 미국에서 수정주의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던 1970년대 이후 1950년대의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 됐다. 그런데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이 배제된 미국식 용어이다. 또한 6·25는 전쟁 전기간을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명칭이 아직 없다고 할 것이다.

인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안겨준 민족사적 사변이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냉전을 고착시킨 가히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분단 시대 한국 현대사에서 최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의 경향: 정치학적 연구의 성행

그간 한국전쟁 연구는 주로 정치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클라우제비츠 Karl von Clausewitz의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말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전쟁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정치학적 연구에서 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편중이 새로운 문제 제기를 불러왔던 것도 사실이다. 1960년대 이래 주로 관변에서 이뤄진 전투로서의 전쟁 연구(전투사)는 한국전쟁 연구의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쟁을 단순한 군사적 전투 행위로 보는 환원적 인식에 매몰되게 만들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수정주의의 직·간접적 영향 아래 이뤄진 한국전쟁 연구 붐은 상대적으로 한국전쟁의 기원과 발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² 수정주의의 대가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이 내란과 혁명으로 시작됐다고 쓰고 있으며,³ 메릴은 남한에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빈발했던 빨치산과 국군과

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전2권)』(서울: 나남, 1996).

3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 xxi. 그렇지만 커밍스가 외세의 책임을 한민족에게 전가시키는 내인론자는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한국전쟁의 원초적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커밍스를 내전론자로 인식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가능성이 있다. 커밍스는 한국전쟁을 내전이자 혁명전으로 보지만 한국전쟁의 기원을 외부의 개입에서 찾고 있으므로 내인만을 유일한 원인으로 강조하는 그런 식의 내인론자는 아니다. 이완범, 「한국전쟁 연구의 국내적 동향: 그 연구사적 검토」, 손호철(외),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1991). (한편 이완범은 위의 글 p. 227 각주 57에서 “커밍스는 전쟁이 내인에 의해 일어났다고 주장한 곳은 없다”고 단정했는데, 이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주의에 대비되는 전통주의자들이 국제전적인 요소를 강조한데 비해 커밍스는 한국전쟁이 내란으로 시작됐음을 강조했을 뿐이다(또한 콜로 등의 초기 수정주의자들도 국제적 환경에 비중을 뒀다). 커밍스는 전쟁이 발발할 때 이미

의 비정규전적 내전에 인민군이 개입함으로써 내전적 상황이 끝났다고 주장했다.⁴ 따라서 한국전쟁의 내쟁적 요소를 중시하는 수정주의자들은 1950년 6월 이후 6·25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상황보다 그 이전에 한국전쟁을 배태시킨 상황적 조건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⁵ 그런데 이런 기원에 대한 상대적 강조를 문제 삼은 학자들은 전쟁의 전개 과정으로 관심을 돌릴 것을 주장했다으며, 그래서 기원뿐만 아니라 전개과정 등도 다뤄지기 시작했다.⁶

영향에 대한 연구: 인적 손실 문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주제는 ‘한국전쟁의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1990년

강대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커밍스는 내전의 한 기원으로 미·소의 분할 점령을 지적하기 때문에, 전쟁의 보다 근본적이며 원초적 원인은 내인이 아닌 국제적 원인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커밍스는 전통주의자들이 내인에 대해 소홀히 했던 것에 주목했을 뿐 한국전쟁이 오로지 내전의 측면만 갖고 있는 시종일관적인 내전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스톡이 커밍스를 내전론자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커밍스는 『한국현대사』(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 333에서 내전은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며 먼저 한국을 아무 생각 없이 갈라놓고 식민지 정부기구를 재건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렇지만 그는 p. 3과 p. 369 등에서 한국전쟁이 내전임을 명백히 주장하기는 했다). 또한 커밍스는 pp. 417~418에서 이 전쟁은 내전이었지만 순전히 한국인들끼리의 내부 충돌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내전설을 주장했던 메릴도 외인론자들의 주장이 주류였던 학계에서, 내쟁적 요소와 국제적 요소를 모두 전쟁 원인으로 고려하면서 남북한 간 전쟁전의 갈등을 분석해야 전쟁의 기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 Origins of the War*(Newark, Delaware: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p. 54.

4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New Yo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이런 남쪽에 한정된 ‘내’의 범위에 비해 시몬스식 내전civil war 개념에서 내전은 남북 간의 내전이다. Robert R.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Peking, P'yong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New York: The Free Press, 1975).

5 커밍스는 1950년 6월 25일은 한국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시작됐던 갈등에 대단원denouement의 막이 이륙된 계기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Bruce Cumings, “Introduction: The Course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53,”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 41. 1950년 6월 이전에 이미 10만여 명의 인명이 손실된 한반도에서의 상황에 주안점을 둔 메릴은 전쟁은 1948년 초부터 1950년까지 점차 고조-에스칼레이션됐다고 주장한다.

대부터 사람들 간의 싸움이었던 전쟁 연구에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빠져 있으며 한국전쟁은 박제화된 사실로 전쟁기념관에 처박혀 있다는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전쟁의 영향에 대한 연구 과제 설정과 연결되었다.

한국전쟁의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적 손실이다. 이 전쟁의 인적 손실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부상자와 실종자-전쟁 고아 등을 계산하지 않고 단지 사망자만 본다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남북한 각각 약 60만 명(596,967명 중 민간인 373,569명[사망 244,633명, 학살 128,936명], 한국군 223,398명⁷⁾과 약 70만 명(700,151명 중 민간인 406,000명, 북한군 294,151명⁸⁾)이 사망해 무려 130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희생됐다고 추정된다. 민간인 사상자의 비율이 세계 역사상 어느 전쟁보다 높다는 사실에서 이 전쟁의 참혹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의 국제전화는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중국군 약 18만 4천여 명,⁹⁾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3만 6천여 명¹⁰⁾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군 14만 9005명, 유엔

6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 두레, 1998). 한편 박명림은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서울: 나남, 2002)에서 1951년 1·4 후퇴까지 다루고 있다.

7 군사정전위와 유엔군의 집계에 의하면 민간인 사망자와 학살자는 동일하다. 그런데 한국군 사망자의 경우 군사정전위 자료에는 위의 수치와 같지만, 유엔군 자료에는 사망 58,809명, 부상 178,632명, 실종 82,318명이라고 나온다. 전쟁기념사업회(편), 『한국전쟁사 6: 한국전쟁의 영향』(서울: 행림출판, 1992), p. 15.

8 일본 내 반이승만 계열의 동포 신문 『통일조선신문』 자료에 근거한다. 전쟁기념사업회(편), 위의 책, p. 15. 최근에 발굴된 라쥬바에프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전쟁 후 100만 명의 민간인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고 한다.

9 일본 내 『통일조선신문』 자료에 의하면 184,128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은 715,872명, 실종 21,836명으로 총 921,836명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전쟁기념사업회(편), 위의 책, p. 15.

10 유엔군의 집계에 의하면 36,991명의 유엔군이 사망했다고 한다. 전쟁기념사업회(편), 위의 책, p. 15.

군 3만 7936명(혹은 3만 3870명), 북한군 29만 4000명, 중국군 18만 4000명이 전사했으며, 남측 민간인은 사망 24만 4663명, 학살 12만 8936명, 북측 민간인은 사망 40만 6000명이라고 집계했다.¹² 이 통계를 앞의 통계와 비교한다면 한국군 전사자는 다소 적으며, 유엔군 사망자는 비슷하고, 다른 통계는 거의 일치한다.

실종자와 부상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물론 더 늘어난다.¹³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통일조선신문』 등의 자료에 준거해 모든 피해를 합산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 민간인 피해가 367만여 명(남 99만여 명, 북 268만 명), 한국군 98만여 명, 북한군 61만여 명, 유엔군 15만여 명(그 중

11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Yoshikazu Sakamoto, *Korea as a World Order Issue, World Order Project Paper*, no. 3(New York: Institute for World Order, 1978), p. 6은 위의 남·북·유엔·중국인 사망자 통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12 『아! 6·25: 6·25 전쟁 50주년 특별기획전』(서울: 조선일보사·전쟁기념관, 2000), p. 120.

13 김학준 교수는 영국 측 자료를 인용하면서 총 약 4백만 명(전투원 3백만 명·미군 14만, 남한군 132만, 미군 이외의 유엔군 1만 이내, 북한군 52만, 중국군 90만·민간인 1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Survey of International Affairs, 1953*(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 210; 김학준, 「한국전쟁」, 한국정치학회(편), 『현대한국정치론』(서울: 법문사, 1986), p. 185. 그러나 이 수치는 사상자와 사망자를 분간하지 못한 과장으로 추정된다. 한 자료에는 남측 130만 명(사상자 포함), 북한 및 중국 250만 명, 미국 11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최정세,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 김대환(외),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 열음사, 1987), p. 132. 남한 약 150만 명과 북한 약 250만 명, 중국군 약 100만 명,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5~6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자료도 있다. 손호철(외),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서울: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1991), p. i. 그런데 존 할리데이와 브루스 커밍스는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고 전제하고 총 사망자 수는 3백만에서 4백만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2백만 이상의 북한 민간인과 약 50만 명의 북한 군인, 약 100만의 중국 군인(중국의 한 1차 자료는 그 숫자를 3백만으로 기록하고 있다), 약 100만의 남한 민간인들이 죽었고(전투와 관련해서는 4만7천 명), 미군은 54,246명이 죽었는데, 그 중 33,629명이 전투 중 사망했다. 기타 국가의 사망자 총수는 3,914명인데, 그 중 686명이 영국인이며, 유엔군 중 사망률과 부상률이 높은 나라는 터어키, 프랑스, 그리이스이다. Jon Halliday and Bruce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London: Viking, 1988), pp. 200~201. 한편 중국의 전사인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편),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옮김(서울: 세경사, 1991)에 의하면 북측은 남측의 109만 명에 피해를 입혔으며, 그 중 유엔군 39만 명, 국군 64만 명, 기타는 유엔군이라고 한다.

미군이 14만 명), 중국군 90만여 명¹⁴으로 총계 631만 명이다. 그런데 이는 과장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으며 경상자·행방 불명자까지 포함하거나 중복된 사람을 가려내지 못한 통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조선전사』에는 한국군 피해를 1,130,965명으로 적시해¹⁵ 전과를 과장했다.¹⁶ 한편 1996년에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피해통계집』에 의하면 남측의 인명 피해는 군인 616,702명, 경찰 19,034명, 민간인 990,968명 등 총 1,626,70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¹⁷ 북의 피해는 공식 발표도 없으므로 더욱 오리무중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발굴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2등 서기관 페트로프 П. М. Петров의 『1950~1953년 전쟁기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경제의 총 손실 규모: 정보 보고(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통계국 자료에 의거)』(평양, 1954년 3월 자료)에 의하면 북한 민간인 중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28만2천 명이며, 남측으로 납치되거나 실종된 자가 79만6천 명, 중국 및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소개된 자가 8만 명, 분계선 설치 후 남조선 지역에 편입된 자 4만 명, 군 징집자가 60만 명으로 집계됐다.¹⁸ 민간인 사망자에 국한해 보면 남측의 집계인 40만 명 선보다 적은 편이다. 한편 남측 학자가 북의 피해를 추정한 것에 의하면 인명 피해는 300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한 자는 군인 50만 명 이상이며 민간인까

14 『통일조선신문』 자료에 의하면 921,836명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며, 정부 자료를 인용한 유완식·김태서, 『북한 삼십년사』(서울: 현대경제일보사, 1975), p. 137~138과 군사정전위 자료에는 90만 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편), 위의 책, p. 15.

15 전쟁기념사업회(편), 위의 책, p. 15.

16 『북한 삼십년사』와 『통일조선신문』 등에 의하면 98만여 명에 이르며,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군 자료에는 각각 34만여 명과 31만여 명이라고 나온다. 뒤의 두 자료도 우리의 피해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 전쟁기념사업회(편), 위의 책, p. 15.

17 정토웅, 「한국전쟁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군사』, 제40호(2000년 6월). 민간인 피해는 유엔군 집계와 동일하며, 군인 피해는 유엔군을 합친 수치로 『한국전란지』 합계본(606,449명)과 유사하다.

18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 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36.

지 합치면 90만 명 이상이다.¹⁹ 이는 당시 북한 인구 1천만 명 중 무려 30%의 인명 피해에다가 9%의 사망률을 보인 것으로 군인 사망자의 경우는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²⁰ 이런 통계들을 감안해 군병력 피해만을 종합한다면 유엔군을 포함한 남측 군대와 북한군의 피해자(중국군 인명 피해 제외, 북한군 부상자 포함)가 각각 50만 명 정도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²¹ 또한 이산가족 문제는 6·25 전쟁이 낳은 가장 심각한 휴유증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피해일 것이다.

사회사와 인류학적 연구: 사람들의 전쟁 경험

이렇게 많은 인적 피해를 논한 것의 결론은 한국전쟁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당시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살아남은 자의 '수난'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수난에 대한 연구는 논의조차 금기시되든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1990년대 말 이후 노근리 사건을 필두로 거창 사건, 함평 사건 등이 조명을 받으면서 '학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됐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정치사적 시각에서 접근됐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민중들의 전쟁 경험에 대한 논의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중 민중들의 삶을 관심 깊게 지켜보던 김동춘 교수는 1999년 10월 9일 한국산업사회학회가 주최한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논문인 「한국의 인권 현실과 인권의 사회학」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19 정토웅, 위의 글, p. 212.

20 『북한 삼십년사』에는 52만 명이 사망했다지만 『통일조선신문』에 의하면 294,151명 사망에다 부상 225,849명, 실종 91,206명이다. 따라서 앞의 자료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숫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정전위 자료에도 사망-부상-실종자 구별 없이 총 52만 명이라고 나온다. 단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국전란지』의 1년지, 2년지, 3년지, 4년지를 합계하면 508,797명으로 나오는데, 이는 전과에 대한 당시의 과장일 가능성이 있다. 전쟁기념사업회(편), 위의 책, p. 15.

21 김광수, 「한국전쟁 인적 피해」, 미발표 논문.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돌베개, 2000)를 출간했다. 피난-점령-학살을 화두로 삼은 이 책의 제4부 「학살」 편에서 저자는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천착했다. 그는 이 책을 ‘한국전쟁 당시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억울하게 스러져 간 남북한의 모든 이름 없는 영령들 앞에 바친다’고 적고 있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전쟁이 일반 민중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고자 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전쟁에 대한 사회사적 문제제기가 이뤄졌다.²² 전상인, 「한국전쟁의 사회사를 위해」(『사회비평』 제24호, 2000년 여름)이 그것이다.²³

한편 최근에는 김동춘 교수의 문제제기에 기반해 일군의 인류학자들이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서울: 한울, 2003)를 간행했다. 기존의 연구가 정치적 성격이 짙은 ‘위로부터의 연구’라고 파악했는지, 부제를 이렇게 달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 중 전쟁 이후 국가주의 또는 반공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망각되거나 민중들은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이후 빨갱이 또는 부역자로 단죄된 사람들 및 그 가족들의 전쟁 경험을 주로 인터뷰해 자료화한 후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연구를 해서 한 권의 논문 모음집으로 구성했다. 인류학자들에게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생애사 life history, 구술사 oral history 방법론을 채용해 전쟁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었던 것이다.

22 사회학계의 한국전쟁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집대성됐다.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전쟁과 한국 사회변동』(서울: 풀빛, 1992)이 그것이다.

23 전상인, 『고개 숙인 수정주의: 한국 현대사의 역사사회학』(서울: 전통과 현대, 2001)에 재수록. 이 글은 김성철의 『역사 앞에서』(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라는 일기와 박완서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서울: 웅진출판, 1995),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서울: 웅진출판, 1992)라는 두권의 소설, 할머니 시인 류춘도의 『잊히지 않는 사람들』(서울: 사람생각, 1999)이라는 시집에 대한 서평이다.

반공의 관점에서 기층민, 인권, 여성 등의 관점이 완전히 누락됐다고 진단한 저자들은 구술사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생활사를 복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주로 전남의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전쟁 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생활세계 속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 속에서 전쟁 경험이 어떻게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에 기반해 지방민들의 역사적 경험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민군 치하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부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 자의반타의반 빨치산이 됐던 애기(박정석, 「전쟁과 ‘빨갱이’에 대한 집합 기억」)며, 강진의 대표적 양반 가문인 해남 윤씨 집안이 일제 시대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좌우익 대립 구도 속에서 ‘좌익 또는 빨갱이 가문’으로 낙인 찍히는 과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염미경, 「전쟁과 지역 권력 구조의 변화」) 등은 텍스트화된 역사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전쟁 경험에 대한 구술을 통해 한 필자는 사람들이 전쟁 상황을 이념보다는 훨씬 전통적인 사회 관계의 틀로 이해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윤형숙, 「전쟁과 농촌 사회 구조의 변화」). 이것은 한국전쟁을 이념전으로만 환원시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부분적으로나마 허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분단의 장벽에 막혀 목소리조차 드러낼 수 없었던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도달하고, 대립과 전쟁을 극복해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한국전쟁 연구는 기원에서부터 시작해 전개 과정, 영향에 대한 연구로 순차적으로 그 연구의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이다. 이제 기존의 국제정치사적 접근이나 기원에 대한 과도한 강조 등이 극복되고 국내정치적 접근이나 사

회학적 접근, 포로 등에 관한 심층적 접근 등도 추구하고 있다. 한편 보다 새로운 주제로서는 유엔군의 점령지에 대한 군정 실시, 세균전 문제, 전쟁 문학 등도 연구의 과제로 제기됐다. 이제 정치적 접근에서 사회적-인류학적 접근으로, 거시적 접근에서 미시적 접근으로, 집단적 이념의 차원에서 개인적 생활의 차원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된 시점에 영향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그동안 소외받았던 민중의 삶도 주목 대상이 됐으니, 평화 체제 구축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

이완범 wbleef@aks.ac.kr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역임. 저서로 『3.8선 획정의 진실』(2001), 『한국전쟁』(2000) 등이 있다.